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큰 힘”

문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

주변 정세 변화 상황 설명
“한반도 비핵화,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등에 큰 기여”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의 변화 상황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선택(Sun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3 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는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을 목표로 1997년 처음 출범했다. 기존 아세안(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에 한·중·일 정상이 초청돼 현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3 각국이 서로 다른 문화와 제도, 역사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금융·식량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지역 정세의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겨져 왔던 북핵 문제가 최근 큰 진전을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아세안+3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이 큰 힘



ASEAN+3 정상회의의 참석차 싱가포르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선택 회의장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응웬 수언 폭 베트남 총리, 문재인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스톱 존 모리스 총리, 아웅산 미얀마 국가고문,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등 긴장 완화가 역내 동아시아공동체가 표방하는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아세안+3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염원하는 아세안+3 국가들의 품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다 견고한 동아시아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위기 대응

체계 공고화 ▲혁신을 통한 물리적 연계성 강화 ▲인재 양성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노력 등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치안미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M) 협정문 개정과 쌀 비축제도(APTERR) 협정 개정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설명했다. 동시에 ▲공급사슬연계(SCC) 공동연구 착수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타당성 연구의 조속 추진 등을 통한 아세안+3간 연계성 강화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인재 양성을 통한 역내 교육 및 기술격차 해소가 동아시아의 실질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최근 본격 추진 중인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 건립과 같은 인재양성 사업을 아세안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구호를 위한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가 개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 간 채널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발한 협력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뉴시스

문 대통령 “한미동맹, 北 대화 이끌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미 펜스 부통령과 접견

싱가포르에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대북 강경파인 사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35분간 면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 관련 언급은 최대한 피하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반면 펜스 부통령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을 확인하며,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0분부터 55분까지 35분간 싱가포르 선택 컨벤션센터 양자회담장에서 펜스 부통령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또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힘”이라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난 2월 펜스 부통령과 함께 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며 “그동안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있었고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했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정책의 근간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굳건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공급적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비핵화를 이뤄내야 하는 부분에서 진전을 봐야 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2차 정상회담에 대해 저희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란 것은 미국인뿐 아니라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함께 맺어진 동맹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동맹 관계”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주한미군 태권도 수련 장병

17일 태권도원서 ‘블랙 벨트’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주한미군 태권도 수련 장병들을 ‘세계 태권도 섬지, 태권도 원’으로 초청해 ‘Black Belt Program’을 실시한다.

오는 17일부터 1박 2일 간 진행되는 ‘Black Belt Program’에는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중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80여 명이 참가한다.

태권도 수련생들 중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태권도 기본자세와 품새, 힐링 태권체조, 태권도 시범공연 관람 등이 진행되며 1박 2일의 짧은 기간이나마 태권도의 진수를 배울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도의회 의정 중계석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 부실”

송지용 의원, 행감서 “특단 개선책 마련해야”

전라북도 환경복지위원회 송지용 의원(부외장, 더불어민주당, 완주 1·사진)은 2018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면에 있어 전반적으로 너무 부실하다며 이에 대해 특단의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여성교육문화센터 사업에 있어서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대다수이다”며, 남성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발굴

과, 다문화와 접목된 교육추진 등 전북도만의 특색있는 사업발굴 필요성과 우수사례 반영을 위해 타 시도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예산운영과 관련해 “순세계 잉여금이 너무 많은점, 출연금이 인건비 운영비 외에 사용할 수 없어 보조사업과 공모사업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예산 구성비에 있어 이자수입이 너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은행과 협의해서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운영전반에 대한 특단의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드론 용역 수행기관이 사업 따내”

김철수 의원, 경제산업국 행감서

전년도에 용역을 맡아 수행한 용역기관이 다음해 관련 사업을 따내 사업 시행주체로 나섰다



15일 경제산업국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철수 의원(정읍·사진)은 “전북도는 2016년에 드론 용역 맡긴 기관에 바로 다음 해인 2017년에 드론 육성사업을 주었다”며 전북도의 사업추진 행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전북도는 ‘전라북도 드론 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기관’이 용역기관으로 선정돼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용역을 수행했다.

전라북도의 드론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용역이 필요했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며, 용역의 타당성이 인정돼 추진됐다.

문제는 바로 다음 해인 2017년 수요창출형 드론산업 육성사업 신규 추진하는 데 사업시행 주체를 바로 몇 개월 전 용역 수행기관이었던 ‘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

을 맡겼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2018년 올해는 사업비를 6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지금도 C기관에 사업시행을 맡겨 추진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 불과 몇 개월 전에 드론산업 육성 용역을 맡긴 곳에 바로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맡긴 전북도의 행정행위가 올바른지 검토가 요구된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김철수 의원은 전북디자인센터의 방만한 예산집행 실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디자인센터는 연간 27억 8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디자인 역량강화사업과 2억원의 서남권 디자인 기반구축사업이 서로 비슷한 교육과 포럼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예산낭비를 우려했다.

김 의원은 “과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디자인 교육인원 참여가 2~30명에 그칠 정도로 참여도 저조했고 국제학회까지 개최하며 무리한 예산지출이 뒤따랐다”고 지적했다.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과정상 부적절한 점은 있었지만 전문적인 심사와 선정과정을 거쳤다”면서 “기관이 드론 전문기관이라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